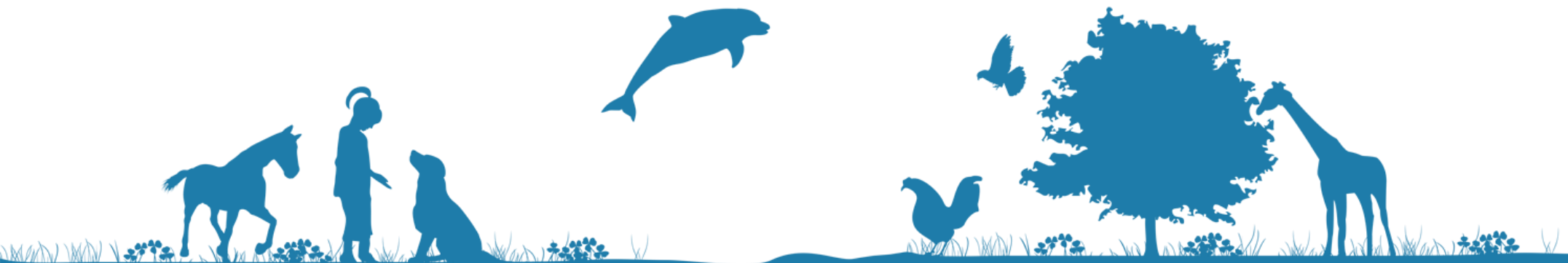


2019 7월

동물학대대응포럼





01 동물학대와 동물의 구조·보호

02 동물학대 대응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적 한계

03 동물보호법의 보완과 강화



법조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 및 개선방향 모색

동물자유연대 조해인 법률지원센터장

주인에게 면도칼로 목에 상해를 당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백구 찬이, 란이

1.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의 정의와 행위

□ '동물'의 정의 (법 제2조 제1호)

-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으로 정하는 동물

□ '동물학대'의 정의 (법 제2조 제1의2호)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의 정의와 행위

□ 금지되는 '동물학대'의 유형 (**살해**, 법 제8조 제1항)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의 정의와 행위

□ 금지되는 '동물학대'의 유형 (상해, 법 제8조 제2항)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피학대동물의 격리 조항

□ 구조 및 보호 조치 (법 제14조)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학대 대응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적 한계

CASE 1. 평택 불법 번식장



□ 사건개요

- 2019. 1. 28.경 제보를 접수, 동자연 경기도 평택시 불법 번식장 현장 방문
- 60여 마리 장모치와와등 방치, 마당에서 방 안까지 개들의 배설물로 가득한 상태
- 죽은 지 얼마 안 된 개 사체 1구와 사체의 머리 부분 발견

□ 문제점

- 평택시 담당자는 견주 동의서 요구
- 견주와 협상 통해 소유권 포기받고 7시간만에 구조
- **법률규정의 '모호성' > 시스템적/즉각적 대응 어려움**

동물학대 대응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적 한계

CASE 1. 평택 불법 번식장



□ 법률상 '긴급' 문구가 없어서 구조가 불가능?

- **법 제14조 제1항 본문** : 시장은 **제8조 제2항**의 학대를 받아 적정한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보호조치를 하고, 학대자로부터 격리조치 해야 함
- 법 제8조 제2항 제3의2호 :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별표1의2 제2호 나목, 마목 : 동물의 사체는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하고,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학대자 처벌 가능?

- 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제2항 위반 : **2년/2천만원 이하**
-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위반 : **500만원 이하**

동물학대 대응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적 한계

CASE 2. '시킴스' 살해 사건

□ 사건개요



- 2019. 6. 26.경 화성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던 길고양이 '시킴스'를 수차례 바닥과 벽에 내리쳐 죽이는 장면이 CCTV에 찍힘

- 같은 달 27. 근처 하천에서 고양이 사체 발견, CCTV에 위 학대자가 사체 유기하는 장면 찍힘.

- 수원지방검찰청은 **약식기소(벌금 500만원)**



□ 문제점

- 학대자가 다시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아 기르겠다고 함.

- **법률규정의 '부존재' > 추가 범죄 예상되나 막을 방법 없음**

동물학대 대응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적 한계

CASE 2. '시킴스' 살해 사건



□ 학대자의 입양행위를 금지할 수 없나?

-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간접적으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호 : 농림축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 시 소유자 등에 대하여,

. 동물이 있는 장소에 출입·검사하거나(7일 전 통지),

.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음

동물보호법의 보완과 강화

구분	문제점	방향 및 대안
법령의 보완·강화 (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자체의 부재 ✓ 모호함에 따라 다양한 해석 ✓ 처벌 없는 선언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개정(안) 입법활동
실효적 적용 확대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에 의한 해결 필요 ✓ 공무원의 소극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유사 시스템 도입 ✓ 메뉴얼(체크리스트)
처벌의 강화 (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 수준 낮아 재범 확산 ✓ 예방 효과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설득 ✓ 높은 벌금형 유도

※ 참고 1. 동물보호법 개정방안 (2017. 12. 20. 변주은 변호사)

※ 참고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2017. 12.)

동물보호법의 보완과 강화

※ 양형기준 예시 - 재물손괴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동물보호법의 보완과 강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우04714)

전화 | 02-2292-6337 팩스 | 02-2292-6339 이메일 | admin@animals.or.kr